

# DMZ 일대 '평화관광 거점'으로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강원도 등 3개 광역시 아우른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마리나·크루즈산업 육성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도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문화 콘텐츠를 대폭 확충해 '평화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승선 정원당 연간 보험료를 현행 2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춰 해양레저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 관광 육성'을 여행·레저 산업 발전의 양대 축으

로 삼기로 했다.

우선 DMZ의 접경지역인 3개 광역시도(강원도·경기도·인천) 및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를 조성하고 문화관광축제와 국제전자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접경지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도 발족한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의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남해안 관광 루트 조성, 명품 숲 50선 발굴 등도 추진하기

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관광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확대되는 관광 수지 적자 폭을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국내 지역관광은 서울과 제주·부산 등 일부 도시에 편중된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객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관광 수지는 무려 137억5,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마리나·크루즈 산업 육성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거 내놓았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관광 정책이 산·돌레길·캠핑 등 육상 자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몇 안 되는 해양관광 사업 역시 단순 체험 행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리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승객 정원당 의무 보험료를 연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고 통영과 부산에는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마리나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